

캘리포니아 전력부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강 경 성
산업자원부 시장조성팀 사무관

풍요로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해 여름부터 전기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IT산업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실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로서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 있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태가 전력회사의 발전부문을 분할하고 전력거래를 시행한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독점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급기야 정부, 한전 노사 공동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개편 전후의 캘리포니아 전력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98년 구조개편 당시 요금이 미국전체 평균보다 40%, 오레곤, 네바다 등 인근 주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향후 전력수요는 이미 포화되어 정체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주내 발전소 건설 등 공급력 확충보다는 인근 주의 값싼 전력의 수입과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이었다.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대형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전력부족사태의 근본원인은 캘리포니아주의 특수한 전력수급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T화라 불리우는 신경제한상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발전소 건설은 하지 않은 데 따른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발전능력의 저하와 노후화된 발전소의 잦은 고장정지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지역에는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구조개편을 통해 인근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수입의존적 정책기조에다 결국 인근 주 역시 경기호황에 따라 수입 확대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에다가 도매가격은 자유화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법적으로 동결하는 비합리적인 가격규제정책으로 판매회사들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판매회사의 재정위기가 태로 파급되었고, 전력거래가 급감하여 정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결국 구조개편이 진행된 많은 지역 중 유독 캘리포니아주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구조개편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주가 안고 있는 전력수급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잘못된 가격규제정책이 이를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98년 4월 구조개편 이후 발전시장이 신규사업자에게 개방되면서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부족현상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나라는 시장구조나 전력계통, 구조개편 추진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와는 차이가 있으나 이번 사태를 反面教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 해 말 통과된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구조개편 이후에도 경쟁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장기수급계획대로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요금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운영체제도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구조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